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

National Information Strategies to Integrate the Dispersed Information and Knowledge Resource

곽동철(Dong-Chul Kwack)*

초 록

본 연구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우리나라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현재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체제의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자원의 자원유형별, 관리기관별 특성에 따른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며, 넷째,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Given Korea does not have a competitive edge compared to developed or other competing countries in national information and knowledge resour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ensure the best out of the limited resource. It is believed that Korea has to develop a national information policy which enables effective and efficient communication, management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resource within Korea. In order to ensure the strategic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resource in Korea, this research encompasses the followings: First, the needs for establishing a strategic system that helps ensure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resource on national level are probed, Second, current status of national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policy is reviewed, and some problems are brought forward, Third, to resolve the problems a strategic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resource according to material types and individual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is proposed, for effective allocation of government budget. And,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and models proposed, a national information strategy to integrate the dispersed information resource is suggested.

키워드: 지식정보관리, 정보관리시스템, 정보관리, 정보자원, 정보전략, 정보정책,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resource, information strategy, information policy.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wackdc@chongju.ac.kr)

■ 논문접수일 : 2004. 2. 17

■ 게재확정일 : 2004. 3. 5

1 서 론

오늘날 사회·경제적 분위기는 지식정보자원의 급증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이러한 자원을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과 정보센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어느 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만으로는 충분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물리적 자급자족이 불가능함으로써 이를 공유하기 위한 도서관 간 연계활동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도서관의 유형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 국가적으로 지식정보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는 도서관은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심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도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정책의 부재, 소속기관장의 무관심, 전문직 사서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이 소속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

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연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창출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제국이나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창조적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환언하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국제경쟁력 위기의 핵심인 고비용 구조와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지식정보 인프라의 창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각기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그러한 대학이나 연구소가 소속한 행정부처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 생존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그리고 이러한 도서관과 관련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각 행정부처 소속의 지식정보자원 관리기관은 기관 또는 부처 이기주의를 초월한 전략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우리나라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기반

으로 학계의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현재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의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자원의 자원유형별, 관리기관별 특성에 따른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며, 넷째,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의 현상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는 정부나 도서관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 각각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전체 보유량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서비스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관종의 도서관이 서로 연계·협력하거나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리기관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여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당위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많은 대학 및 전문도서관들이 함께 각종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유통사업

을 수행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여러 유형의 협력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상호 경쟁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곽동철 2003). 그 내용들은 ①회원가입을 통한 지식정보자원의 실질적인 공유 도모, ②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국가 온라인목록 제작 및 공동 활용, ③소장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공동 활용, ④발간물 및 복본자료의 교환 또는 기증, ⑤소장 자료의 상호대차(ILL), 원문서비스(DDS) 및 참고서비스 협조, ⑥연구개발정보(연구정보)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공동 세미나 등의 개최, ⑦기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협의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국가나 소속 행정부처의 서로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외 학술지(전자잡지 포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국가 라이선스 주도, 연구정보자원 개발의 주제별 또는 지역별 역할 분담, 분담목록 및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시스템 조성, 학술지·전문도서 등 국가목록 공동 개발 및 상호 이용, 목차·초록·전거 등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개발 및 상호 이용, 상호대차 및 원문서비스 협력시스템 구축, 회원기관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와 제도개선 제안활동, 기타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의 유통 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 및 전문도서관들은 이러한 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부터 부분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일부의 사업들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 중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발히 추진되지 못한 것인지를 냉철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리기관들의 난립과 함께 구심점 부재, 행정부처별 이기적인 사고로부터 비롯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규들의 제정과 시행, 국가 고유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유통 체계의 미구축,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유통을 위한 호환성과 표준화 미흡, 국가차원의 확고한 정책 수립 부재와 정치적 상황논리의 수시 적용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인 추진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연계 및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의 정비를 통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어느 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및 특정 기관의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전략을 고려한 후, 사업 분야별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관련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정보주권의 수호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유형의 지식정보자원 관련 사업들은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 및 사업들 사이의 연계성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하여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정보주권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선진제국의 지식정보식민지나 지식정보자원의 예속화를 지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곽동철 2001). 또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은 각기 자신들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날로그 자료가 중요한지 아니면 디지털자료가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중지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정보자원을 적게 소장하거나 전혀 소장하지 않고 정보증개에만 치중하는 기관일수록 전자산업계와 보조를 맞춰 디지털 자료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

자료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연구개발정보(학술정보 또는 연구정보)는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자원으로서 도서관자료를 그 유형이 어떠한지 이용자에게 보다 신속하며, 정확하고, 저렴하며, 편리하게 제공해야 함에는 아무런 이권이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러한 자원을 소장하고 있거나 항상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Joseph Matthews 2002). 그러나 이를 망각할 때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데 있어서 선진제국의 지식정보 식민지화나 지식정보의 예속화를 지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각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유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은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대학도서관을 대표하거나 전문도서관을 대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일부 기관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삼고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불안하기 그지 없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기관들이 대표성을 갖는 중심기관으로 성장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각각의

기관들은 그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우리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도 이제는 지식정보자원의 외화내빈 상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도서관의 위상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의 학술지나 학술도서 및 보고서 등의 양으로 가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는 달리 나름대로 소속 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 및 활용에도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현재 국내 어느 도서관이나 기관 및 전문직 사서들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수행 중에 있는 연구과제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양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생산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여 가공한 후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상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가장 근원적인 지식정보자원의 양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의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범위는 그 나라의 지식정보자원 공유 체제를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미국의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약 11만종의 학술잡지

를 소장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 대학도서관이 지속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외국학술잡지의 종수는 하버드대학 도서관의 1/7정도인 약 15,000종으로 나타나고 있다(곽동철 2001). 또한 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자산 규모는 9,600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29배인 28조 달러, 일본은 약 10배인 9조6천억 달러로 분석하고 있다(정희식 2003). 이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국제경쟁력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간의 연계협력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 도서관계 전체가 아닌 개별 도서관이나 지역적 도서관연합체가 전무후무한 전천후 도서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전개와 함께 나타나는 지식정보자원의 특징으로서 생산량 급증과 가격의 상승, 생산 및 축적 매체의 다양화, 유통과 접근 채널의 다변화, 이용과 입수 행태의 다기화 등은 이러한 개별 도서관의 욕심이 부질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어느 도서관이나 지식정보자원관리 기관도 개별적이거나 부분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완전무결한 기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Tatiana V. Ershova and Yuri E. Hohlov 2002).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관련기관들은 대학과 연구소 등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지식정보자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 생산 결과인 지식정보자원을 수

집하여 관리하고 활용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및 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과의 연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의 현상과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 구축이라는 면에서 자원유형별, 관리기관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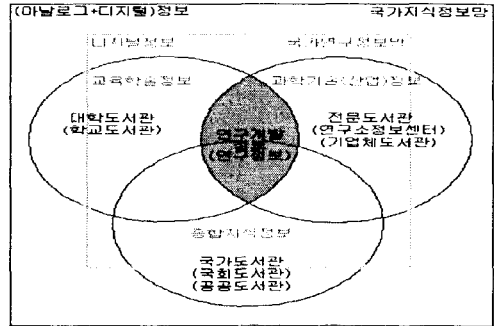
3 지식정보자원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연계

오늘날 국가연구정보망과 같은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디지털 정보자원만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면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지식정보관리정책에서 아날로그 정보자원에 대한 제대로 이루어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디지털 정보자원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정보자원의 극히 일부분만이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가치가

높은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인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유통 비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부분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온 정보자원마저도 거의 유료화 되어가고 있다(Jo Bryson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논의가 마치 지식정보자원 논의의 거의 전부인양 주장하는 경영자나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식정보자원의 생성과 유통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고려가 미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자나 기관은 국가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식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이나 운영보다는, 단지 경영자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기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색다르게 내보일 수 있는 실적위주의 경영이나 기술맹신주의에 사로잡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자원을 근간으로 하면서 디지털 정보자원을 포함하는 형태로 국가지식정보망을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각 관종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 등이 국가경쟁력 유지와 향상, 그리고 최대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면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고려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지식정보망을 구축한다고 정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연구정보망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정



<그림 1> 도서관·정보센터와 지식정보자원의 관계

보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종합적인 견해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자원관리 기관들도 소속 행정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날로그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디지털 정보를 마치 전부인양 호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관련 정책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정보자원을 다루는 기관이나 정책입안자가 관련 용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등에서도 유사한 지식정보자원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용어들을 <그림 1>에서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제작 및 유통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성격에 따

라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산업정보, 교육학술정보, 종합지식정보, 연구개발정보, 연구정보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식정보 관련 법규에서도 지식정보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는 종합적인 지식정보자원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다양한 용어들을 함께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집단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는 교육학술정보나 교육정보 및 연구정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소정보센터 등을 포함하는 전문도서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나 기술정보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도서관에서는 산업기술정보나 산업정보 및 기술개발정보라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편의상 크게 구분하면 과학기술(산업)정보, 교육학술정보, 종합지식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각의 용어들은 디지털 정보와 아날로그 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처럼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이 아무리 각기 관장할 지식정보자원을 주제영역별 또는 형태별 등으로 구분한다할지라도 부분적인 중복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즉,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으로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는 어느 정도 중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소위 연구개발정보 또는 연구정보를 다루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관리기

관들은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각각 담당할 지식정보자원을 인문·사회과학분야나 과학기술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이러한 기관들의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거나 실제로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특정 학문들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제적 복합학문으로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의 담당업무를 주제영역별 또는 자료형태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립·추진해야 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선진국의 지식정보속국이나 문화예속화를 지양하기 위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총량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술한 연구개발정보(연구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지식정보자원은 크게 국내 생산정보와 해외 수입정보로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입정보의 수집과 유통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자원의 확보 및 활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나아가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별 특성에 따라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 업무에 대한 전략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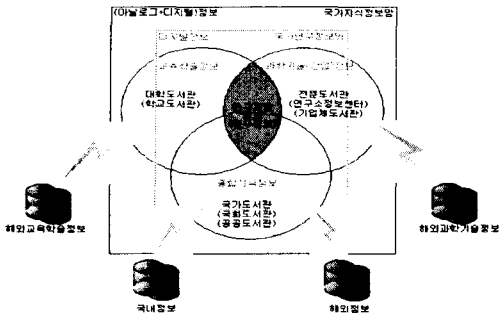
4 기관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전략적 연계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은 향후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국내 생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축적, 유통에 대한 논의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각 기관들은 스스로의 목적성을 부여하면서 해외 수입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KISTI는 전신인 KORSTIC(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시기부터 계속 국내 연구보고서와 학술지의 수집 및 유통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KERIS는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 소재 정보의 디지털화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20개 행정부처의 63개 과제관리기관들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우리 고유의 지적자산인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집, 축적, 관리, 유통시스템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에 대한 우리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의 사업 추진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도 다른 부문에 비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각각의 지식정보자원관리기

관들은 국내 학술지, 대학의 각종 출판물과 해외학술지, 해외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등의 수집 및 유통에 있어서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서로 영역 다툼 또는 주도권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이 다음의 <그림 2>에서와 같이 원천적으로 각 관종별 도서관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한 각 관종별 도서관에서 다루는 지식정보자원의 주제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느 조직이나 처음 발족할 때에는 법규에 명시된 명확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진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의 조직 규모는 점점 커져가면서, 사업 영역의 중복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그 중복 정도가 문제시되고 있는 해외 종합지식정보와 해외 과학기술정보 및 해외 교육학술정보 부문도 <그림 2>에서와 같이 편의상 구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분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의 설정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지식정보자원의 범주를 엄격히 나누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학제적 연구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다 효율적인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해서 자원별 특성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정보유통체



〈그림 2〉 도서관·정보센터와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관계

계를 정비하여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각 행정부처별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한 내용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다음의 대표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연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각 기관들은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분명한 설립근거와 이에 따른 서로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각 기관들이 설립근거에서 명시된 설립목적에 따라 부여받은 위상을 지켜 나가면서 상호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이러한 기관들의 소속 행정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위상을 지니는 국가차원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관련 정책이나 예산 조정 기능을 발휘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 표에서와 같이 우리 지식정보자원관리

기관들은 정보의 유형별로는 종합지식정보, 과학기술정보, 교육학술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소속 행정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 국회,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소속 행정부처는 분명하지만 지식정보의 유형별 구분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이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추진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①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관계 설정 문제, ②KISTI, KAIST, K-JIST 사이의 업무 추진 문제, ③KISTI와 KERIS의 영역 구분 문제, ④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공공기술연구회 200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 체계 및 이와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과 상호 연계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법규적으로 정책 조정상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농수산물유통체계에 있어서 수많은 생산자들과 여러 유형의 중간도매상들을 무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판매체계에만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부는 범정부차원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표 2>와 같이 자신의 의지대로 거의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사업과 관련이

〈표 1〉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별 설립근거 및 위상

기관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	KAIST	K-JIST	KERIS
설립 근거 법규	· 정부조직법, 문화관광부와 소속기관직제	· 국회법, 국회도서관법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과학기술원법	· 광주과학기술원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유관 법규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위상	· 국가대표도서관	· 국회 입법 활동 지원	· 국가대표 과학기술정보기관	· 교육지원기관 (학술지원사업과 NDSL운영)	· 교육지원기관 (학술지원사업)	· 교육정보화지원, 교육학술정보제공 등
수집 정보	· 종합지식정보	· 종합지식정보(사회과학분야)	· 과학기술(산업)정보	· 과학기술정보	· 과학기술정보	· 교육학술정보
소속	· 문화관광부	· 국회	· 국무총리실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관리	· 정보소장 및 중개기관	· 정보소장 및 중개기관	· 정보소장 및 중개기관	· 정보소장 및 중개기관	· 정보소장 및 중개기관	· 정보중개기관
소장 자료	· 인쇄잡지 : 19,562종 · 단행본 : 468만권 · 학위논문 : 약 67만권 · 기타 : 비도서자료	· 인쇄잡지 : 18,244종 · 단행본 : 968,850권 · 학위논문 : 700,035권 · 기타 : 비도서자료	· 인쇄잡지 : 3,800종 · 전자잡지 : 5,500종 · 단행본 : 9만권 · 특허 : 25백만건 · 기타 : 회의자료/규격	· 인쇄잡지 : 1,200종 · 전자잡지 : 4,500종 · 단행본 : 10만권	· 인쇄잡지 : 335종 · 전자잡지 : 200종 · 단행본 : 2만권	· 정보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자체적으로 자료를 소장하지 않음
보유 DB	· 목록정보 : 1,400만건 · 목차정보 : 91만책 · 전문정보 : 27만책	· 목록정보 : 355만건 · 전문정보 : 4,430만건	· 목차정보 : 907만건 · 초록정보 : 1,890만건 · 전문정보 : 2,000만건	· 목차정보 : 1,300만건 · 링크정보 : 220만건	· 목차정보 : 118만건 · 링크정보 : 1.7만건	· 목록정보 : 630만건 · 목차정보 : 1,400만건 · 전문정보 : 50만건 등
제공 대상	· 내부 및 일반	· 내부 및 일반	· 산학연정 (8,856개처)	· 내부 및 타대학 (227)	· 내부 및 타대학 (102)	· 대학(400여개)
주요 정보 활동	·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 공공(도) 종합목록 구축 · CIP	· 정기간행물기사 색인 작성 및 구축 · 한국박사·석사 학위논문총목록 작성·구축	· STM정보수집·보존 · DB제작 및 유통 ·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작성 및 구축 · DDS	· 전자잡지컨소시엄(KELSI) 운영 · 전자잡지 통합 서비스 · DDS	·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운영	· 대학도서관 종합목록구축 · 해외학술DB컨소시엄 · ILL/DDS

〈출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 서울 : 동정보원, p.30.

〈표 2〉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관리체계

구분	담당기관	주요 지식 정보자원	역 할
국가지식정보 자원 관리센터	한국전산원	· 국가지식정보 통합 검색시스템	·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표준 적용실태 파악 · 지식자원 관리실태 평가 지원
종합 정보 센터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 과학기술정보 · 산업기술정보 · 건설공사정보 · 해양수산정보
	교육학술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 학술논문DB · 정치·경제· 사회통계 자료 · 국방학술정보
	문화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 국가문화유산 · 문화예술정보 · 한국영화자료 · 국가기록영상 · 독립운동사
	역사	국사편찬 위원회	· 한국역사정보 · 유교문화정보 · 한국여성사
	시범센터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IT분야 연구 보고서 등
전문정보센터 및 연계기관	각 부처 및 주관기관		· 해당분야 지식정보의 공유 및 유통 전담 · 전문정보센터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 · 분야별 DB 관리 및 분야포털 · 새로운 제도와 기술에 대한 사전테스트 · 해당분야 종합정보센터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수집, 생성, 저 장, 관리

<출전>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시행계획. <http://www.ipc.go.kr>

없는 산하기관인 한국전산원을 정점에 두고, 그 아래에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관리사업을 추진해 온 각 부처 산하기관들을 묶어서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중심의 관련 예산을 책정·분배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상 아날로그 정보자원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선택과 집중 정책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

(표 3) 2004년도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예산(안) 비교

부처	시행 계획명	근거 법령	주요 추진사업 계획	예산 (단위:백만원)	
문화관광부	문화정보화 촉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 - 도서관정보화 	국립중앙도서관 2,137 9,191	11,328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화촉진	과학기술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 -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 과학기술전문정보 확충 - 과학기술종합지식경영시스템 구축 - 기타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KISTI 14,670 NDSL 1,581 KISTI 200 KISTI등 500 KISTEP 1,000 기타 592	14,670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 촉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지식정보 유통·활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보화 지원 - 국가학술연구 DB 구축 - 한국역사정보화사업 - 한국학정보화사업 	KERIS 8,994 3,600 4,355 372	17,321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	지식정보자원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DB 구축 분야의 지식정보 디지털화 사업추진 및 관리 - 국가지식정보자원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의 활성화 - 지식정보 자동생성·유통체계의 보급 및 확대 - 지식정보자원 활용기술개발 및 표준화 확산 -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정책 지원 및 홍보 강화 공공정보화지원사업 정보화촉진사업 	56,056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기타 798 36,389	93,243
국회	입법정보화 촉진	국회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정보인프라 구축 - 전자도서관구축사업 	국회도서관 2,957 2,851 4,943	10,751

<출전> 정보통신부, 2004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http://www.ipc.go.kr>
 한국전산원, 2004년 주요사업. http://www.nca.or.kr/body/nca_info02_02.htm

을 근거로 <표 3>에서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KISTI,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KERIS, 국사편찬위원회,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4, <http://www.ipc.go.kr>).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정보통신부는 국무총리실보다 더 높은 위상을 지니고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사업 추진이 국가차원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라면 바람직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내용을 분석할 때, 전자의 아날로그 지식정보자원을 도외시한 채 전시효과적인 불완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총액이나 국토면적 및 이용자 집단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국가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 관련 사업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자원관리상의 쟁점 사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선진국의 지식정보속국이나 문화예속화를 지양하기 위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총량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와 행정조직 체계상 별도의 법정부적인 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선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 측면에서, 한국전산원은 정보기술지원 측면에서 국가 예산의 배정 및 집행을 국가차원에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각종 필요한 지식정보를 찾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한국전산원에 접근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무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 행정부처 소속별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의 효율적인 국가 예산의 집행도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의 해결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반면에 국회도서관은 국회법과 국회도서관법에 의해 국회 입법 활동의 지원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의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보다 직급이 높은 차관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두 도서관은 부서수, 직원수, 직원의 전문직비율 및 학력 수준, 예산, 추진사업, 국제협력활동 등을 비교할 때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도서관은 서로 설립목적이 뚜렷하게 다르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잘 살려 협력한다면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 총량의 증가는 물론 그 유통에 있어서도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외형과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확고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입법부의 대표도서관이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식정보 기관으로서 입법부 관련 각종 지식정보자원의 효과적인 수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 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두 도서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조직을 일원화하고, 나아가 예산 및 지식정보자원 관련 사업 등을 통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국가전자도서관(NDSL) 및 전자잡지컨소시엄(KESLI), 광주과학기술원(KJIST)의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사이의 업무 추진 문제이다. 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연구기관의 위상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간에 상호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관리 및 유통환경이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설립당시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기 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KISTI가 다른 두 기관과 상호 연계하여 이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KISTI가 두 기관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과 인력 및 시스템 등을 지원하면서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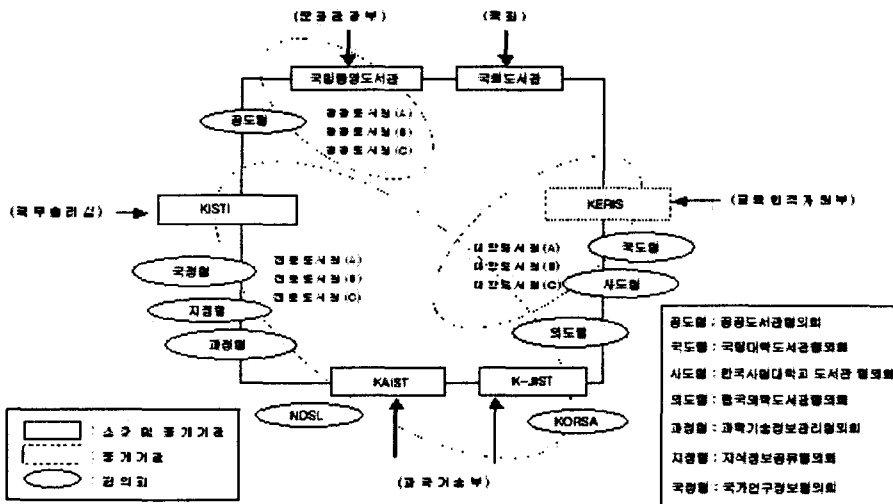
셋째, KISTI와 KERIS의 영역 구분 문제이다. KISTI와 KERIS는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관리정책의 변천과정을 볼 때, 모두 교육인적자원부(문교부) 소속의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후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자는 국무총리실, 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소속 행정부처로 삼고 있다. 이 두 기관의 사업 영역 중복 문제는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하는데 인터넷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기관이 관장해야 할 지식정보자원을 아날로그자원과 디지털자원으로 구분하거나 기술진보에 따라 지식정보자원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의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ISTI와 KERIS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연구개발정보로 국한하여 살펴보면 각 기관의 전체 사업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추진사업이 문제제되고 있다. KISTI는 KIN-ITI와 KORDIC의 통합을 거쳐 운영체제를 정비하면서 기관 설립근거와 위상을 내세워 국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서 연구개발정보의 최대 소장기관으로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수행해오던 디지털 환경의 지식정보유통사업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KERIS는 KISTI에 비해 후발 기관으로서 지금은 문부과학성으로 통합되었지만, 그 당시 일본의 문부성 산하 학술정보센터(NACSIS)를 모델로 설립된 기관

이다. KERIS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학술정보의 제공이라는 위상을 내세워 국내 및 해외 교육학술정보의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이두영 2002). 물론 KERIS는 KISTI와 달리 지식정보자원을 소장하지 않은 순수한 지식정보자원의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 연계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이 그림은 국방, 공안 등과 같이 직접적인 연구개발정보의 유통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제외하고 작성한 것이다(곽동철 2003, 윤희운 20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또한 KERIS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종합목록의 작성 및 구축, 해외 학술지 및 DB 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등은 아

날로그 환경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 등 유관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에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형식과 범위를 변화시킨 디지털버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내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디지털화시켜 나가면서 크게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 사이에, 작게는 KERIS와 KISTI의 추진 업무들 사이에 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과 정보자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로섬게임과 같은 경쟁체제를 지양한다면, 국가 전체의 지식정보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사업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해결 될 것이다.



<그림 3> 국내 지식정보자원 관리기관의 연계 체제

따라서 KISTI나 KERIS는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식정보자원을 발굴하여 지식정보의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수집, 조직, 유통시킬 수 있는 체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양 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KERIS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 KISTI는 그 외 행정부처 소속의 모든 연구개발정보 관련 전문도서관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 KERIS는 동일한 행정부처 소속임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KISTI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이 나머지 전 행정부처의 능동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화 및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식정보자원의 생산기관을 중심으로 KERIS는 국내 및 해외 대학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관장하도록 한다. 즉,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되는 학위논문, 연구논문집, 출판물 등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충실하게 수집, 관리하도록 지원 또는 유도하면서, 이에 대한 소재정보의 DB화를 지원 또는 유도하여 정보자원의 보유량을 늘려 공유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KISTI는 대학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생산되거나 정보센터에서 유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서 KISTI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각종 회

색자료 등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뿐만 아니라 국가 대표 과학기술(산업)정보기관인 만큼 아날로그 지식정보자원의 마지막 소장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셋째, KERIS와 KISTI가 상기 전 단계까지의 방안을 충실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및 해외 학술지 및 데이터베이스 유통과 관련하여 업무의 중복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기관사이의 협의 기구나 또는 국가차원의 조정기구를 만들어 관련사업의 중복방지 및 조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구는 국가차원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균형 유지와 함께 해외 학술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매협상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구축 방안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의 구축은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부처, 기관 및 개인의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총량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여기서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면에서 사업의 중복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재정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자원관리를

포함한 제반 정보기술 투자에서 재조정(reorientation)기를 지나 집중화(convergence) 단계에 진입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지금이 가장 적기이므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 투자 및 업무 추진에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첫째,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관계 설정 및 역할 정립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두 도서관을 각각 설립목적에 적합한, 그리고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국가도서관으로 육성·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즉, 3권 분립의 원칙에 충실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행정부에 속한 국립도서관으로 국가의 도서관을 대표하면서 행정부 산하 각급 도서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소속으로 입법 관련 도서관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두 도서관을 국토면적이나 국가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조직을 일원화하고, 나아가 예산 및 지식정보자원 관련 사업 등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된 국가대표도서관의 소속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대표도서관이 모든 도서관들의 도서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적으로도 선진국 도서관들에 비해 손상이 없을 정도의 인력, 예산, 규모,

위상을 갖추도록 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입국으로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로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정비된 공공도서관들은 국가대표도서관과 연계체계를 갖고 문화입국 또는 지식정보관리 측면에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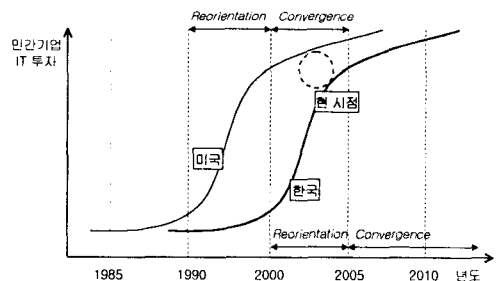
둘째,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63년, 1994년), 국회도서관법(1963년, 1988년), 과학기술기본법(1967년, 2001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1999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2000년) 등의 상충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법규상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 체계에 혼선을 제거함으로써 각 기관별 명확한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현행 법규에 기반을 두고 태동한 각 기관들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이나 정관을 확대 해석하여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 대표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하는 추세이므로 기관들 사이에 원만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원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식정보관리 인프라를 얼마나 훌륭히 갖추고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식정보관리 인프라를 위한 세 기둥은 문화, 과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문화 관련 지식정보관리 인프라로서 국가대표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학, 교육 관련 지식정보 인프라도 유관 기관들을 재조정하여 국가 대표 기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과학부분은 KISTI, 교육부분은 KERIS가 담당하면서 전문화된 내용과 같이 두 기관의 철저한 협력을 전제로 업무를 분장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식정보관리 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내 및 해외 지식정보자원을 총괄하는 행정체계의 난맥과 이에 따른 관리주체간의 과열경쟁이다. 정부의 거의 모든 행정부처가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 각각 지식정보자원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기능을 주관함으로써 산하 도서관 및 정보센터 등이 제각기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정보를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식정보관리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복 수행, 하위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의 극심한 이기주의 등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윤희운 2003).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처 및 기관 이기주의나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각 행정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부처나 기구는 부재한 상태에 있다. 이를테면, 문화

관광부 산하의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일종의 순수한 장관 자문기구에 불과한 처지이다. 실제 이 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에도 어려운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들은 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에 관한 조언이나 건의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그 타당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지식정보자원 관리 기구 및 정책들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여기서 미국의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나 일본의 '과학기술·학술심의회'는 순수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의 '박물관·문서관·도서관위원회'는 전문가와 이익집단 대표의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 정치형태나 위원회 체제 면에서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김용원 2002,



<그림 4> 정보기술의 투자 행태 곡선

〈표 4〉 주요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기구 및 정책 비교

구분	국명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EU
정치형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복수국가조직
최초법률		도서관서비스법	공공도서관법	도서관법	도서관	NLB법	
주요보고서		· 와인버거보고, · 도서관정보서비스국가계획	· Dalton보고 · 영국도서관백서	· NIST구상 · 학술심의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구상	· Library 2000 조사위원회보고	· 유럽도서관창설에 관한 보고
행정조직		교육부/교육연구·개선국/도서관계획과	문화매체스포츠부/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유산국/박물관·도서관·문서관과·박물관·도서관지원과	문부과학성/초등교육국(학교도서관); 학술국제국(대학도서관); 애학습국(공공도서관)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도서관박물관과	MITA, NLB	EU위원회제13총국
정책자문기관		· 도서관 및 정보학에 관한 국가위원회(대통령직속)	· 박물관·문서관·도서관위원회(문화매체스포츠부 산하)	· 과학기술·학술심의회의(문부과학성 산하)	·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문화관광부 산하)	· NLB(Policy Integration & Research 부문)	· 자문위원회 골베르, 경제사회평의회
국가(대표)도서관		의회도서관(LC)	영국도서관(BL)	국립국회도서관(NDL)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도서관	EU위원회도서관
전국시스템형태		분산형	중앙집중형	중앙집중형	중앙집중형	중앙집중형	집중/분산형
전문단체·기관		미국도서관협회(ALA)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	일본도서관협회(JLA)	한국도서관협회(KLA)	싱가포르도서관협회(SLA)	EDC, ERC, EDL
도서관·정보관련법		도서관봉사 및 기술법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	도서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NLB법	
주요정책제안서·정보화계획		· NII, · GII · HPPC	· Information UK 2000, · CSR, IT for all	·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지향하는 기본방침 · e-Japan 중점계획	· 정보화추진기본계획 ·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 IT2000 · Library2000 · Singapore One	· ESPRIT · 도서관프로그램 · IMPACT 프로그램
특색		민간주도형 · 민간부문 활용 · 도서관정보재단 · ALA활동 등	정부주도형 · 도서관 활동의 강한 기반과 전통 · BL의 국내의 도서관 지원 기능 · 전문단체 활동	정부주도형 · 부처 통합과 법인 추진 · 민간부문협력, NII·JST·NDL 활동	정부주도형 · 관련 계류정 정비 · 국책연구·교육기관활동(KISTI, KERIS)	정부주도형 · 다국어, NLB에 의한 국립·공공·학교도서관 통괄	복수정부협력형 · 가맹국(2004년까지 25개국) 다국어, 지역내 격차해소

<출전> 金容媛, 2002. 「圖書館情報政策」. 東京: 丸善株式會社, p.18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 서울: 동정보원, p.72.

Resource 20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NCLIS 2003, Miriam A. Drake 2003). 우선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해당 행정부처에 주무 부서를 설치하여 도서관정보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문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검토하고자 1966년 대통령에 의해 도서관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ies)와 도서관에 관한 전국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Libraries : NACOL)를 설립하였다. 그 후 NACOL의 답신과 권고에 따라 국가도서관 및 정보학위원회(NCLI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관한 법률(공법 91-3450)에 근거하여 1970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였다. 그 기능으로는 (1)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국민 요구 결정, (2)국민요구를 반영하는 국가정책 권고, (3)국가정책실행에 있어 대통령, 의회, 주 지방정부 및 기타 기관 조언을 들 수 있다. 이 위원회 구성원 및 임기는 미의회도서관장 등 15명(5명은 도서관원 또는 정보전문가, 그 외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출판관계, 회계 감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도서관 및 정보학위원회는 미국도서관협회(ALA), 전문도서관협회(SLA), 의학도서관협회(MLA),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법률도서관협회(AALL), 연구도서관협의회(ARL), 정보산업협회(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미국정보학회(Ameri-

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도서관정보자원위원회(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등과 상호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구의 행정부내 다른 부처와의 관계는 부처에 대한 명령이나 통제 권한은 없고,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건의 및 그와 관련한 각 부처간의 정책 조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소집권한, 동 회의의 기획운영에 대한 책임 등을 지니고 있다. 그 주요 활동으로는, (1)국민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요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개발과 권고, (2)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정책에 관한 정부 및 기관에 조언, (3)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정책개발, 조정, 신규 프로그램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부처에 도서관 관련 주무 부서를 국 단위의 조직으로 설치하고 그 아래에 2개과를 운영하면서 전문가와 이익집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순수자문기관이 아닌 혼합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도서관정보위원회(LIC: Library and Information Council)는 1995년에 설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국가정보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와 정책을 추진하는 몇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내적으로는 각 행정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도서관 및 정보정책을 조정하고, 국외적으로는 지식정보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적 차원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 자원을 포함한 전체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 기구가 선진국들이나 우리의 정부조직 행태에 비추어 <그림 5>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되어 상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기구의 설립근거, 운영형태, 행정 부처들과의 관계, 설립주체 또는 공공성 정도, 이익대표성, 구성인원수, 대상 분야 등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6 결 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차원의 지식정보관리정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문제점들로는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 유통기관의 난립과 함께 구심점 부재, 행정부처별 독자적이면서도 다른 법률들과 유사한 법규들의 제정과 시행, 국가 고유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유통체제의 구축 미비,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생산, 유통을 위한 호환성과 표준화 미흡, 국가차원의 확고한 정책 수립 부재와 정치적 상황논리의 수시 적용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주권의 수호 및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총량 증가라는 측면에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이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중복업무를 배제하고 본연의 업무만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지식정보자원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각 기관들의 설립 근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법규들은 단지 제정일자 선·후만 있을 뿐이지, 상·하위의 개념이나 상호 관련성조차도 무시되어 업무의 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들이 설립 또는 업무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식정보자원 관련 법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협의·조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처별 입장을 최대한 살려 서로 대등하게 입법되어져 있다. 그 결과 각 기관들마다 법규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리한 해석과 함께 업무 영역의 확대를 꾀하면서 유관기관들과 비생산적인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국내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대학교서관, 전문도서관 등 포함)들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구나 대표기관을 결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테면 각종 도서관 관련 협의회나 국가차원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흐지부지 명맥만 유지하고 제대로 된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법규적, 예산적, 기술적인 측면이나 대정부 관련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 KERIS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관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 및 유통을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설비 및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련 사업, 예산, 정책수립 등을 함께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이를테면,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국내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들은 서로 소속부처가 다른 상태에서 각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느 한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전담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기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진정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림 5>에서와 같이 가칭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국가지식정보정책자문회의'가 지식정보자원 관련 사업, 예산, 정책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하나의 정부조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련 제반사항들을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간의 통·폐합을 또 다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각 기관별 통·폐합에서와 같이 일대일 또는 흡수 통·폐합 방식을 지양하고, 기관마다 반드시 추진

해야 할 핵심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 즉, 각 기관들은 현행 법규와 설립목적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핵심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설립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업무들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차원 또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차원에서 그 업무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 기관들은 관련 업무와 예산 및 담당인력을 함께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대학과 전문도서관의 연계 및 지식정보관리자원관리기관의 정비를 통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어느 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및 특정 기관의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전략을 고려한 후, 관련 사업의 분야별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의 촉진과 관리 과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등 지식정보자원 관련 제반 법규를 정비하고, 지식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상호 협력 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제정으로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하는 토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축적·보

존·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관 법규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친 후 그 근거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정리·보존 및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지식정보자원 관련 기존 법규들의 불충분한 요소들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공기술연구회. 20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영진단보고서」. 서울 : 동연구회.
- 곽동철. 2003. 국가지식경제 선도를 위한 지식정보유통체제 확립 방안에 관한 고찰. 「정보관리연구회·국가연구정보협의회 2003 공동세미나 자료」. 서울 : 동연구회.
- 곽동철. 2003. 우리나라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관리에 관한 연구. 「지식처리연구」, 4(1).
- 곽동철. 2001.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 지식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4), 143-162.
- 金容媛. 2002., 「圖書館情報政策」. 東京 : 丸善株式會社.
- 윤희윤. 2003. 지식강국을 위한 국가연구정보망 구축. 「정보관리연구회·국가연구정보협의회 2003 정책토론회자료」 서울 : 동연구회.
- 이두영. 2002. 국가정보정책의 혼선에 따른 연구정보 유통체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국가연구정보협의회 창립총회 강연자료」. <http://www.kisti.re.kr>
- 정희식. 2003. 국가 지식 자산의 확충. http://www.hrizine.com/file_pds/pub02/200301/KER_200301_03.pdf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 「국가 과학 기술산업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식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동연구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교육학술 분야 종합정보센터 정보화전략(ISP) 수립 완료 보고서」. 서울 : 동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국가 지식정보 자원 관리 체제 구축 및 전략적 연계 방안 연구」. 서울 : 동정보원.
- 정보통신부. 2004. 「2004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http://www.ipc.go.kr>
- 한국전산원. 2004. 「2004년도 주요사업」. http://www.nca.or.kr/body/nca_info02_02.htm
- Bryson, Jo. 1997. *Managing Information Services: An Integrated Approach*, Brookfield : Gower.
- Drake, Miriam A. 2003.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Why Not?" *Searcher* 11(2) : 32-37.
- Ershova, Tatiana V. and Hohlov E. Yuri. 2002. *Librari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Munchen : K.G.Saur.
- Mann, Thomas. 2001. "The Importance of

- Books, Free Access, and Libraries as Places-and the Dangerous Inadequacy of the Information Science Paradigm.”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4) : 268-281.
- Matthews, Joseph R. 2002. *The Bottom Line-Determining and Communicating the Value of the Special Library*. Westport : Libraries Unlimited.
- NCLIS. 2003. *NCLIS at 25: Twenty-five years of advancing the public's access to knowledge through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http://www.nclis.gov/about/25yrr.html>.
- Resource. 2003.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03*. <http://www.resource.gov.uk/documents/annualfinance2003.pdf>